

MB의 몰락

법정 서는 4번째 전직 대통령

110억 뇌물·350억 횡령 혐의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및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13년 2월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서 5년여 만에 형사 사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피고인이 돼 법정에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지난달 22일 구속 당시 수준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죄명에 걸쳐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 사실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8년 4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와대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김희중 전 부속실장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원장이 이끌던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를 받는다.

또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8억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발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현금 및 1천230만원어치 양복),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3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 뇌물)도 있다. 뇌물 혐의액은 총 111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검찰은 2007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속 제기된 다스 실소유주 의혹도 상당 부분 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 후에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현대건설 뇌물 의혹, 청와대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추가 혐의로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광범위한 보강 수사를 벌인 뒤 1심 재판이 끝나기 전 이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부분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법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별비와 삼성소송비 대납 등 거의 모든 뇌물 혐의와 관련해 자신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이 자신의 것으로 결론낸 다스 역시 크형 이상은씨 등 법적 주주들이 실제 소유주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구속 후 세 차례에 걸친 구치소 방문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이 밖에도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들 상당수도 조만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다만 110억원대 뇌물액 중 가장 많은 68억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은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입원 중이어서 검찰은 기소증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다스 소송비 지원을 결정한 인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부터 구속기소까지 일지

2017년	10월 13일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인 윤세남씨(41) 대표 장모씨(49) 뇌물 혐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 김재우 전 LA 총행사 등 검찰 고발
2018년	1월 15일	중앙지검, 김성우 전 다스 사장·권오 전무 등 소환조사. 과거 특검 조사서 거짓 진술 자수서 확보
	17일	중앙지검, 국정원 뇌물 사건 관련 김진오·김백준 동시 구속
	25일	중앙지검, 다스 및 공관 등 관계사 사무실, 다스 김경호 사장 지택 등 압수수색, 영도빌딩 지하 2층서 다스의 BBK투자자문 투자 관련 문서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 다수 발견
	30일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120억 횡령 다스 경리직원 소환조사. 특가법상 횡령 혐의 피의자로 입건
	31일	중앙지검, 서울 영도빌딩 2차 압수수색, 청와대 문건 등 확보
	하순	김백준, 중앙지검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 발의 청와대 수석비서관·정관 등에 나눠줘' 진술
2월 8일	중앙지검,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 지원한 정황 포착	
	초순	'MB 조카' 이발성 다스 부사장, 중앙지검 비공개 소환조사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지분 일부 차명보유 시인
	12일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추가 비자금 단서 포착' 발표. 김성우 전 사장 등 횡령 혐의 입건.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영모 김백준에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으로 확보
	14일	중앙지검, MB 차명재산 차명피기 혐의 이발성 구속영장 청구. 영장청 '이 전 대통령이 다스·도곡동 땅 실소유주' 적시. 이발성도 같은 취지 진술
	15일	중앙지검, 다스 뇌물 혐의 삼성 이발성 전 부회장 소환조사. 다스 소송 비용 대납 사실 및 청와대의 대응 요청 등 사실관계 인정. 중앙지검, MB 차명재산 차명피기 혐의 이발성 구속
	19일	다스 고발사건 수사팀, 횡령 혐의 120억 횡령금 '계정' '계좌' '계좌' 등 특검 기록. 다스 실소유주 관계증거 확보
	20일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발성에 공판 대표 구속
	25일	중앙지검,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비공개 소환조사
	3월 4일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발성 차명재산 구속기소
	5일	중앙지검, 'MB 차명재산 차명피기 혐의 이발성 구속영장' 청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송영호 청와대 이사진 등 MB 측 불법자금 수수 관련 혐의로 압수수색. 일부 소환조사
	6일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14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소환 통보
	9일	중앙지검, 'MB 재산관리인' 이발성에 공판 대표 구속기소
	11일	중앙지검, 송정호 청와대 이사진,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상우 삼성증권 전무 등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22일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발부. 22일 새벽 0시19분 이 전 대통령 등 부부구치소에 수감
4월 9일	중앙지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기소	



“우리는 기능인” 2018년 광주광역시 기능경기대회가 금형 등 34개 직종 343명의 선수가 참가해 9일 성공적으로 끝났다. 광주시가 주최한 이번 경기는 지난 4일부터 6일간 광주공업고 등 7개 경기장에서 진행돼 금메달 35명, 은메달 35명, 동메달 35명, 우수상 21명 등 126명이 입상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남 기초단체장 與·野 격돌, 패권은 어디로...

민주 강세 속 평화당 조직 기반 선전 여부 '주목'

3선 제한 등 '무주공산' 선거구 5곳 과열 양상도

6·13지방선거 D-64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가 예전 '야권 텃밭'이던 '싸움'에서 대결 구도 다원화로 사뭇 다른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세는 여전하지만, 당내 최대 지지기반을 전남에 두고 있는 민주평화당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활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무소속 돌풍 등도 배제할 수 없어 추이에 지역정부가 주목하고 있다.

9일 전남지역 기초단체장들의 정당 분표를 살펴보면 도내 22개 시군 중 15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평화당은 2명이며, 무소속도 2명이다. 나머지 3곳은 군수 비리 등으로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중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 조직을 토대로 지지기반 다지기에 분주하다. 우선 광양시장 김재우, 보성군수 김철우, 곡성군수 유근기, 완도군수 신우철 등 도내 기초단체장 4명의 후보를 확정했다. 경선 지역과 후보는 △

순천시장 허석·조중훈 △화순군수 이형근 △구례군 △영암군수 전동평·김연일 △영광군수 이동권·김준성 △장성군수 김수공·윤시석 등 5곳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17일 이전에 당 후보를 결정, 본선거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평화당은 최근 박지원 의원의 전남지사 출마설과 함께 도내 기초단체장 절반을 목표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평화당의 전신인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도내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조직전 양상을 띄는 기초단위 선거에서는 민주당과 해불만하다는 것이 지역정파의 분석이다. 평화당 최고위원회의는 이날 고흥(송귀근), 강진(곽영체), 구례(박인환) 기초단체장 후보를 확정했다. 강진, 광양, 나주, 여수 등 광역의원(9명)과 기초의원(13명) 후보를 포함해 모두 25명을 2차 공천을 통해 확정했다. 평화당은 이에 앞선 1차 공천에서 목포(박홍률), 해남(명현관), 함평(이운행), 화순(임호경) 등 기초단체장 후보 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을 공천했다. 반면 현역으로는 주승용 의원만이 남은 바른미래당은 인물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개 시군 가운데 5곳은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무주공산' 상태다. 박병중 고흥군수와 서기동 구례군수도 3선 연임 제한에 걸렸고, 박철환 전 해남군수는 공무원 인사 평가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김철주 무안군수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관급 계약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역정파 한 관계자는 "광역단체장 선거와 달리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정치적 사안보다는 지역 내 조직의 활동력에 따라 지지율이 출렁인다"며 "결수록 유권자들의 정치의식도 높아져 정치적 배경보다는 인물을 보고 판단해 표면적으로 보이는 정당 지지세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민 기자 3732500@

지역 공공기관 '청년고용' 외면 빈축 ▶7면

완도 전역 '국제슬로시티' ... 세번째 재인증

완도가 국제슬로시티 재인증을 받았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제슬로시티 연맹은 완도 모든 지역을 향후 5년 동안 슬로시티 회원 도시로 재인증했다. 완도는 2007년 12월부터 청산도에 국한해 슬로시티 인증을 받았다. 세 번째 인증을 받은 올해는 슬로시티 범위가 완도군 전역으로 확대됐다. 청산도를 찾은 여행객 수는 슬로시티로 자리매김한 첫해 8만8천 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34만4천 명으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완도군은 슬로시티 확대 인증을 계기로 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해 관광홍보 활동을 펼 계획이다. /차아정 기자

24시 굿모닝

보석불가마 사우나

혈액순환촉진
각종노폐물배출!

첨단중앙로152번길 31
☎ 0507-1662-2207